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 결과 분석과 전망: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Online Series CO 11-14

김 영 윤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에서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2010년 내각의 사업과 2011년 과업보고, 2010년 국가 예산집행 및 2011년 국가 예산과 조직문제를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경제적 성과와 계획을 제시했다.

첫째, 올해 예산지출액으로 5,677억 원(북한원화 기준, 미화 57억 3,000만 달러)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예산액(5,283억 원, 당시 환율로 52억 달러)과 비교, 약 7.46%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만약 올해 책정된 예산을 모두 사용한다면 작년의 지출보다 약 8.96%가 증가하는 셈이다. 2010년 국가예산이 2009년에 비해 8.3% 정도 증액 편성된 것을 보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2010년 국가예산은 애초 계상된 규모보다 1.3% 증가된 초과수입을 시현했다. 지출은 년 초 책정된 예산의 99.9%인 5,210억 원(51억3천만 달러)를 달성, 결과적으로 북한은 약 73억 원에 가까운 재정 흑자를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의 재정이 남한과는 달리 국가가 기채를 통해 운영되는 체제가 아닌 만큼, 재정흑자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 수년 이래 적자재정을 시현한 적이 없다.

셋째, 북한이 책정한 올 국가예산의 부문별 지출 증가율을 보면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지를 잘 알 수 있다. 올 신년공동사설의 기초를

반영하는 듯, 북한은 농업부문에 지난 해 지출 대비 9%, 경공업부문에 12.9%, 선행부문(석탄·전력·금속·철도)과 기초공업 부문에 13.5%를 증가시켜 지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다시 말해 농업부문에는 예산이 증가한 만큼, 경공업과 4대 선행부문에서는 예산 증가보다 더 많은 지출을 계상해 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기본건설지출 항목을 추가, 평양시 10만 가구 건설과 희천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 15%의 예산 증가를 상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북한의 관심이 작금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넷째, 국방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15.8%로 편성해 놓았다. 15.8%라는 규모의 국방예산은 벌써 몇 년째 같은 수치다. 하지만 국방예산이 전체 예산에 고정비율로 묶여있기 때문에 예산의 증가만큼 늘어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 제시된 내용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단연 북한이 중점 지출하는 예산 분야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농업을 비롯한 경공업과 4대 선행부문 및 기초공업, 기본건설부문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적인 예산투입을 계획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그만큼 인민생활의 향상을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를 반영하듯 내각 총리 최영림은 의정보고에서 올해 “인민소비품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해 인민생활 향상에 결정적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올 해를 “인민들이 경공업의 덕을 보는 해로 되게 하는 것”과 함께 “인민소비품 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강력히 밀고 나갈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농업과 경공업 부문의 발전을 강조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금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농업과 경공업 분야에 대한 발전의 필요성을 절박한 심정으로 표출하기까지 했다. 그만큼 기본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것임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역으로는 인민의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아무리 “인민생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자” 라고 다짐해도, 내부 체제개혁이나 제도개선, 이를 통한 외부자본의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인민생활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농업분야에서 연 100만 톤 가까운 식량 부족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현재의 북한에겐 뚜렷한 대책이 없다. 최영림 내각총리는 “무역을 다양화, 다각화해 수출액을 결정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자연자원의 수출, 임가공제품의 수출이 중국에 편중되는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만을 안겨준다.

하지만 북한은 앞으로도 나름으로,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중점은 농업과 경공업 분야에 두어질 것이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때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경제개혁과 개방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이 최근 언급한 경제조치를 통해 전망 가능한 것은 있다. 다른 아닌 앞으로 어떤 식의 대외개방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고인민회의 개최 하루 전인 4월 6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라선경제무역지대」가 「국제화물중계지·수출품가공지·국제적인 금융 및 관광지로 꾸려지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조선아태평화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종료 직후인 4월 8일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대의 독점

권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현대아산에 했다. 이 두 사안은 공히 대중국 경제적 밀착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라진·선봉지역을 중국과 협력하여 개발하고, 금강산 운영권도 중국 소재 기관이나 기업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의 관심을 일깨우는 부분은 다름 아닌 군사부문의 기술개발이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최영림 총리는 “지난해에 과학기술발전에서 특출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CNC화가 힘있게 진척” 되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최첨단기술인 핵융합에 성공하여 세계를 경탄시켰으며 첨단기술제품들이 개발되고 생물공학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다”고 보고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